

뉴 노멀 시대의 정착 및 기업 경영에의 시사점

2012. 12. 21



I. 2013년 경제 핵심 키워드 : 「New Normal」 시대의 고착

II. 「New Normal」의 주요 내용

III. 시사점

최윤식 연구위원(yschoi777@hyundai.com),
함영곤 주임연구원, 이승원 주임연구원,
강영지 연구원, 황정연 연구원

뉴 노멀 시대의 정착 및 기업 경영에의 시사점

2012. 12. 21

최윤식 · 함영곤 · 이승원 · 강영지 · 황정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Korea Automotive Industry Research Institute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요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3년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뉴 노멀」은 ① 저성장, ② 불안정성, ③ 갈등 격화, ④ 정부 역할 강화, ⑤ 포스트브릭스 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저성장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 및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은행권, 정부 및 가계의 디레버리징과 중국의 성장속도 조정 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② 불안정성 :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 및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국 불안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 및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③ 갈등 격화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국가별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율 분쟁, 통상 마찰 및 보호주의 확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럽 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 내 주요국간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정부 역할 강화 :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자국 경제 회복과 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위기의 근원이 되었던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경제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⑤ 포스트브릭스 부상 : 선진경제의 침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던 브릭스가 선진국의 저성장 지속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등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브릭스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New Normal」은 ‘고성장’, ‘물가안정’, ‘작은 정부’, ‘선진경제’로 대변되는 「Old Normal」에 비해 불확실성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국내외 경제 및 기업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저성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같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성과 갈등 격화 등으로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브릭스 등 신흥경제 부상에 따른 기회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New Normal」 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인식 변화’와 ‘신속한 대응’이 2013년 중 기업경영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 2013년 경제 핵심 키워드 : 「New Normal」 시대의 고착

□ 2013년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뉴 노멀(New Normal)”이 본격화되는 시기

- 2013년도 국내외 경제는 유럽 위기 상존, 美 경기회복 지연, 중국 경기둔화 우려 외에도 국내 가계부채 확대 및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불안한 모습이 지속될 전망
-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저성장’, ‘불안정성’, ‘갈등’ 등으로 대변되는 「New Normal」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New 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10년 간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 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 완화, IT 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 혁신 등이 대표적인 Normal 변화로 꼽힘

□ ‘저성장’, ‘불안정성’, ‘갈등 격화’, ‘정부 역할 강화’, ‘포스트브릭스 부상’ 등이 「New Normal」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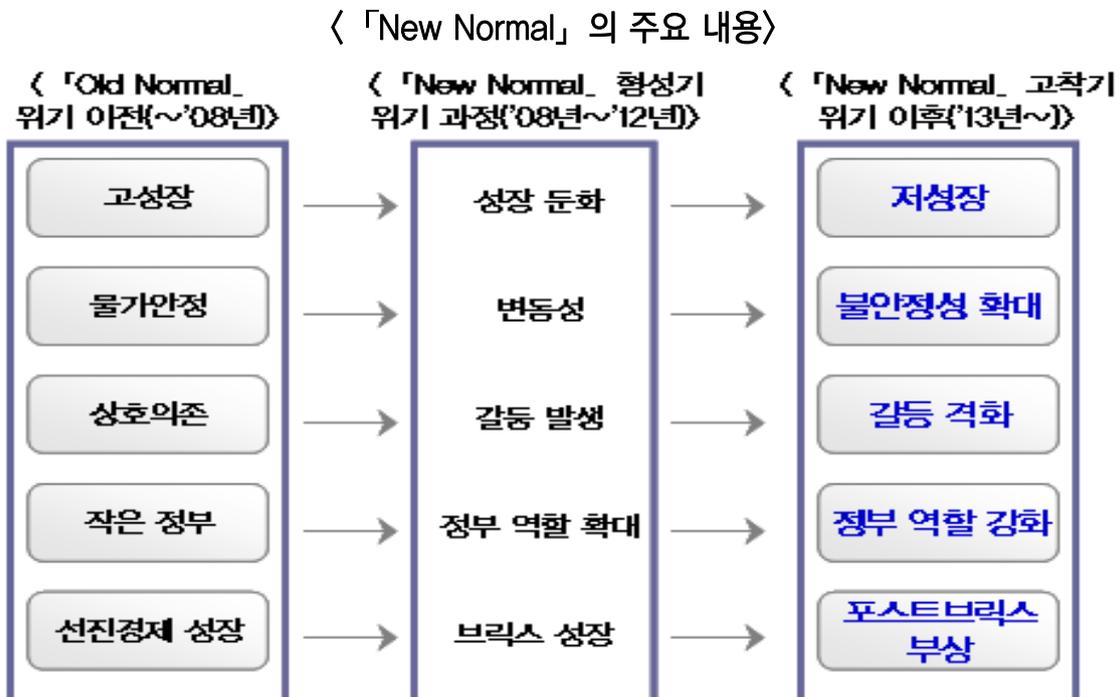
- (저성장)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부진, 글로벌 금융 및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은행권, 정부 및 가계의 디레버리징과 중국의 성장속도 조정 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
- (불안정성)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 및 경제 불안, 주요국의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정국 불안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가 상승 등이 일상화될 전망
- (갈등 격화) 선진경제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와해되고 국가별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환율 분쟁, 통상 마찰 및 보호주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유럽 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 내 주요국간 갈등도 격화될 전망
- (정부 역할 강화) 위기 이후 자국 경제 회복과 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주요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위기의 근원이 되었던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화

- (포스트브릭스 부상) 선진국의 경기침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했던 브릭스 경제가 선진국의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등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브릭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New Normal」의 본격화는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협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임

- ‘저성장’, ‘불안정성’, ‘갈등 격화’ 등으로 대변되는 「New Normal」의 본격화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
- 하지만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브릭스 경제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브릭스의 부상은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나타나게 될 「New Normal」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업 경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New Normal」의 주요 내용

1. 저성장

□ 선진·신흥국 간 경기 동조화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

- 글로벌 금융 및 유럽 재정위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동반부진 현상이 전개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
 - * 선진국이 위기 지속과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
 - * 이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과거 5년(2008~2012년) 중 평균 5.1%p에서 향후(2013~2017년)에는 평균 3.6%p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도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어 세계경제는 3%대의 저성장세 지속
 - * 2013년 미국경제는 올해의 2.1%와 비슷한 수준인 2.0% 성장에 그치고, EU도 올해의 -0.5%에서 소폭 상승한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중국 8.3%, 인도 5.8% 등 신흥국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
- 국내 경제도 대외 경기 악화 및 내수 위축으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선진국의 은행권, 정부 및 가계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저성장에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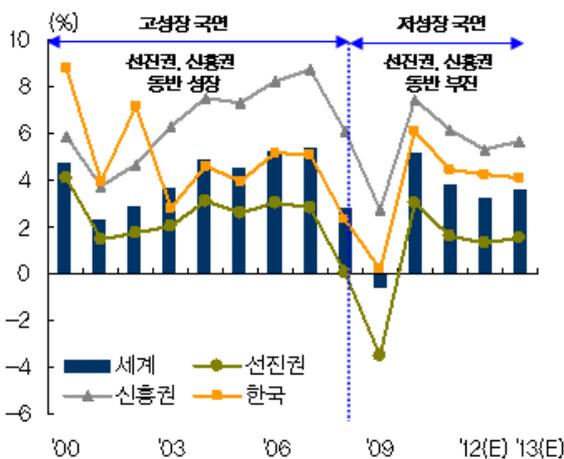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 하락 및 금융규제 강화 등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은행권과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
 - * 미국 가계의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2년 2/4분기에 17.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 1/4분기의 21.4%보다 3.7%p 하락
- 또한 美 재정절벽,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주요국 정부의 부채 축소 본격화
 - * 美 의회예산준비국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의 1.1조 달러(GDP의 7.3%)에서 2013년에는 6천 억 달러(GDP의 4%)로 감소
- 국내의 경우에도 부동산경기 악화 및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가계부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성장속도 조정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

- 수출 위주의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온 중국도 세계경제 부진의 여파로 성장속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공표
 - * 지난 12월 5일 중국 중앙정치국은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거시경제 정책 6대 방향(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소비와 투자 확대, 첨단과학기술 육성, 도시화 추진, 중점영역 개혁 추진, 민생안정 강화)을 발표
 - *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2013년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성장기의 경제 양극화 심화,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속도 조정에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가 제한
-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는 브라질 등 여타 신흥국의 원자재 수출 감소로 이어져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동반부진, 중국의 성장속도 둔화, 금융권 및 정부, 가계의 디레버리징 진행 등으로 2013년중 세계경제 저성장은 불가피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03~'07년 평균	'08~'12년 평균	'13년
세계	4.8	2.9	3.3
미국	2.7	0.6	2.0
유럽(EU)	2.7	-0.1	0.3
일본	1.8	-0.1	1.0
중국	11.7	9.3	8.3
인도	8.6	7.0	5.8
브라질	4.0	3.4	3.5
러시아	7.5	2.0	4.0
한국	4.3	3.0	3.2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 불안정성

□ 유럽 위기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

-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긴축 반대 여론이 높아 긴축 목표 달성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며,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위기 수습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 상존

* 유로존이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 대비 4.5%) 달성 시한을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한 가운데, 주요 IB들은 그리스가 생존 가능한 부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 스페인, 이탈리아 역시 부동산 거품 붕괴, 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 및 프랑스의 경기침체 우려도 여전
- 또한 2013년 9월에는 유럽 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 주요 국가들 간의 정치적 공조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주요국 정권 교체과정에 나타나게 될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상존

- 중국은 올해 지도부 교체 과정이 순탄치 않은데다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중국의 新지도부가 향후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 또한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국 등과의 환율 정책에 관한 갈등 등으로 인해 대외 불안정성이 확대

-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한 미국도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여소야대의 의회가 구성되어 행정부와 의회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
- 일본 역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승을 거두며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지나친 우경화에 따른 주변국과의 불안정한 관계 유지
- 이밖에도 올해 좌파정권으로 교체가 이루어진 프랑스와 연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에서도 긴축과 성장 사이의 딜레마가 지속

□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불안도 확대될 우려

- 이란의 핵개발, 이스라엘의 공습 등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지정학적 리스크)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존재
 - * 중동 산유국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감산(공급 감소), 글로벌 투기자금의 원유 시장 유입 가능성 등도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세계 이상기후와 경작지 확대의 한계로 인해 올해와 같은 곡물가격 급등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는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가능
- 또한 유럽,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완화를 고려하는 등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물가불안이 확대될 전망

□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 주요국의 정치적 갈등 확대, 국제유가 및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일상화될 전망

〈국제유가 및 곡물가 추이〉



자료 : 톰슨데이터스트림, 美 농무부

〈주요국 선거 결과 및 주요사항〉

연도	국 가	구분	결과 및 주요사항
2012	프랑스	대선	프랑수와 올랑드 당선(사회당)
	그리스	총선	2차 총선, 신민당 승리
	미국	대선	버락 오바마 당선(민주당)
	일본	총선	중의원 선거, 자민당 승리
	한국	대선	박근혜 당선(새누리당)
2013	이탈리아	총선	* 마리오 몬티 총리의 사퇴로 조기 총선 실시 예정
	독일	총선	* 총선 이후, 급진적인 정책 시행 가능성 존재

자료 : 언론사 종합

3. 갈등 격화

□ 주요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율 갈등이 심화되면서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존재

- 美 연준은 '08년 말부터 약 2.5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방출(QE1~3)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QE4)을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면적 국채 매입(OMT)을 공표(9월)
- 또한 엔화가치 상승과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를 늘려오던 일본은행(BOJ)도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규모를 확대(12월 현재 91조 엔)
 - * 지난 12월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 공격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표방한 아베가 총리로 취임(12/26)함에 따라 이와 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
-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는 신흥국의 금융 불안과, 통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신흥국 정부는 자국 통화가치 억제를 위한 정책을 구사
 - * 특히 브라질은 5년 이하의 중단기 외국자본에 대해 6%의 금융거래세를 부과, 한국도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외환정책을 강화

□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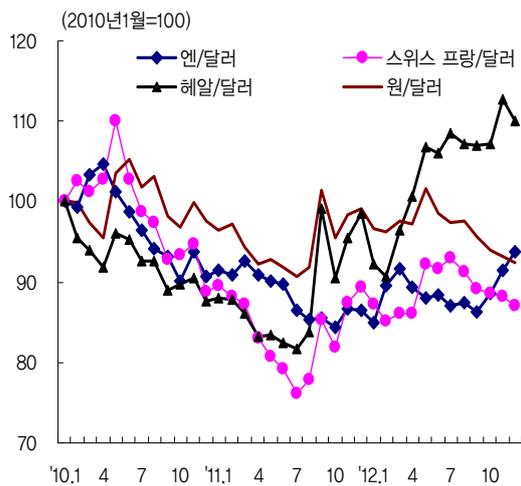
- WTO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1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 * 기술규제, 기술표준 등 무역상의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도 급증, 금년 6월 말 현재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855건으로 2011년 전체 통보건수(1,217건)의 70%에 육박
- 향후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 상존

□ 유럽 재정위기 해결과 관련해서도 각국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 도출 및 구체적인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기침체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EU 및 유로존의 구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독일을 위시한 북유럽 핵심국가들은 재정위기국 및 기타 유로존 국가의 재정긴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및 남유럽 재정위기국은 위기 타개를 위한 성장정책 구사와 긴축 완화를 주장
- 각국 정치권은 재정위기 해결이라는 대의적 명분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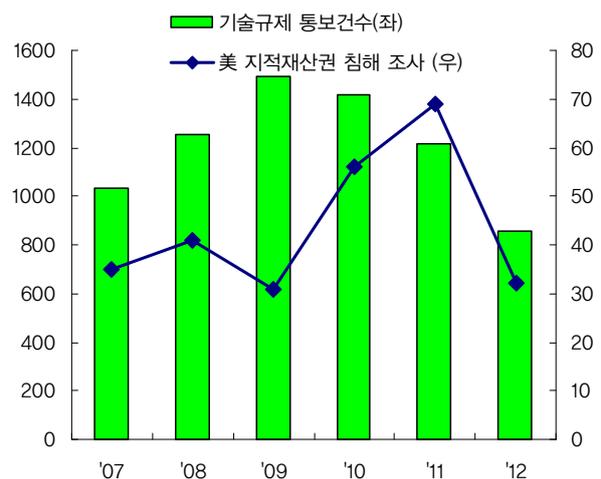
□ 국가간 환율 분쟁이 확대되고 보호주의도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위기 해결 과정에서 유럽국가간 반목과 마찰도 지속적으로 확대

〈주요국 통화가치 추이〉



자료 : 블룸버그, 한국은행

〈기술규제통보건수, 美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추이〉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 '12년 기술규제는 6월, 美 지적재산권은 8월 기준

4. 정부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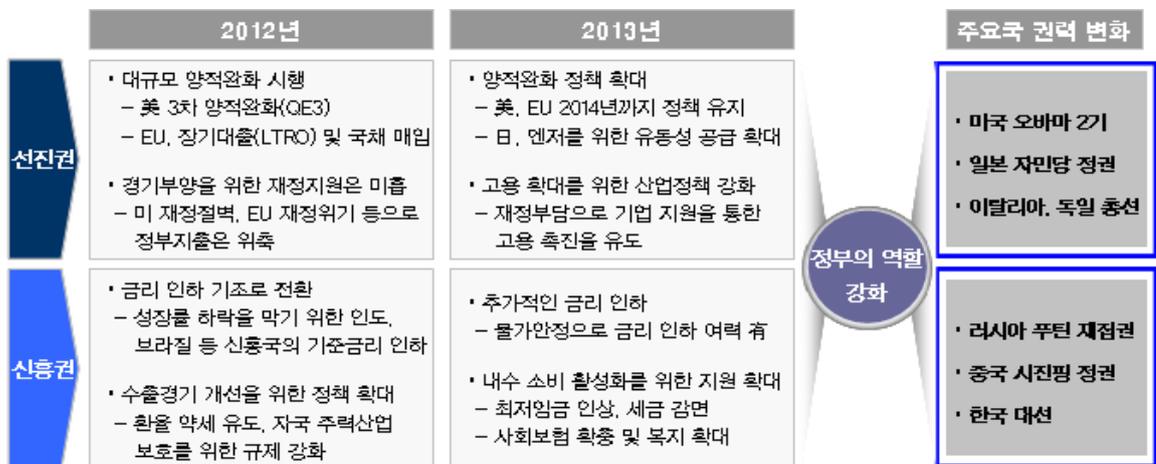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대

-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성장동력 회복과 고용 개선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이 확대될 전망
- 위기 이후 실시되었던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증대
 - * 美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책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
- 특히 韓-中-日 3국을 비롯해 새로 교체된 주요국의 신정부는 정권 초기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각국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책 추진 방향은 차별화

- 상대적으로 정부재정이 양호한 한국과 신흥국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복지 확대,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정부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할 전망

〈2013년 주요국 정부 정책 및 지도부 변화〉



□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도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 각국 정부는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확대
-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무역 금융 활성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특히 고용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경우 자국업체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확대될 전망

□ 한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시스템위기가 초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바젤Ⅲ’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또한 글로벌 환율 갈등이 격화되면서 외화자금의 단기 유출입 및 통화 강세를 차단하기 위한 신흥국의 자본 규제도 확대될 전망

□ 경기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증가,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

〈2013년 주요국 자동차산업 정책〉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비기준 강화로 친환경차 개발 유도 ▪ 통상여건 개선을 통한 자동차 수출 확대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A, 피아트 등 자동차업체 구조조정 지원 ▪ 獨, 佛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 지원,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강화
신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자주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수출 지원 확대 ▪ 브라질, 러시아 :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 자국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국가 확대로 수출 경쟁력 제고 ▪ CO₂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 시행 예정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금융규제 정책〉

	주요 내용	시행 시기
바젤 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은행의 자기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건전성 향상 	2013년
블커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은행의 자기자금 거래 금지 ▪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출자의 원칙적 금지 	2014년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미권을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 (美 금융안정위, 英 금융정책위 등) 	2010년
외화자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이나 금융거래세 부과 	2009년 이후

자료 : 국제금융센터, 언론사 종합

5. 포스트브릭스(Post-BRICs)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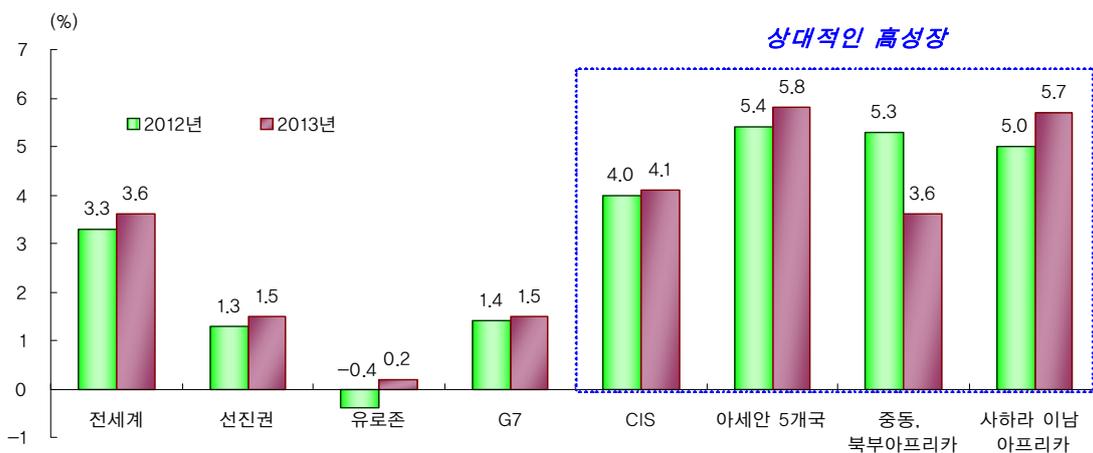
□ 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브릭스의 성장세도 둔화되는 경기 동조화 속에서 포스트브릭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경기 악화로 중국, 인도 등 브릭스의 고성장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등 포스트브릭스가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부상
- 브릭스는 이미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전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반대로 세계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서 포스트브릭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

□ 특히 2013년 중 아세안 등 포스트브릭스는 고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

- 2013년에도 선진국은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브릭스 또한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겠으나, 아세안, 아프리카 등 포스트브릭스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IMF에 따르면 2013년 선진권 경제성장률은 1.5%에 머물겠으나, 아세안은 5.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5.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권역별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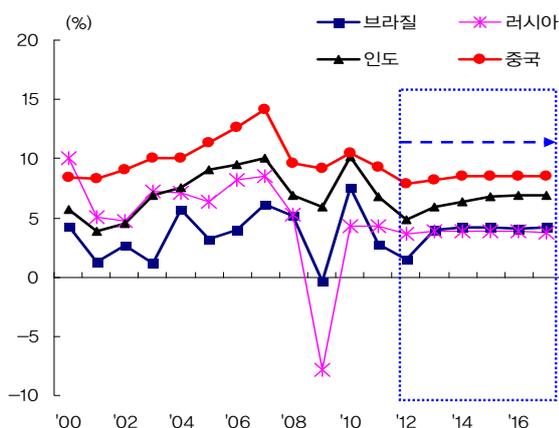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 브릭스는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포스트브릭스가 그 중심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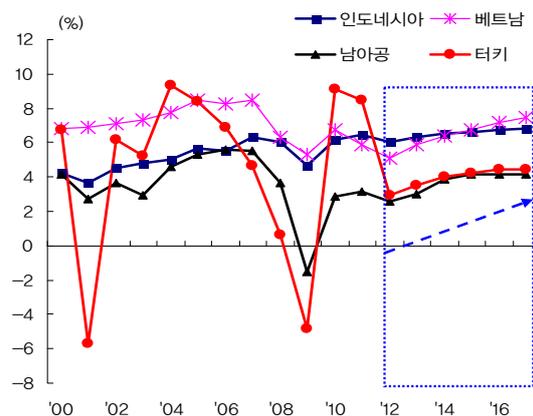
- 세계경제의 19.3%(PPP 기준 25.8%)를 차지하는 브릭스는 향후 성장세가 위기 이전보다는 둔화될 것이나, 5%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를 포스트브릭스로 선정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평균 연령(27세)이 낮기 때문에 향후 경제활동인구 및 소비계층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오닐 회장은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를 차세대 신성장국가로 지목
 - * 오닐 회장은 MIKT와 BRIC을 묶어 성장시장(growing) 시장으로 분류하기도 함
- 美 경제誌 비즈니스인사이드는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를 포스트브릭스로 제시했는데, 이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10%가량을 보유하여 잠재소비시장으로의 가능성이 높음
 - * 美 외교전문誌 포린폴리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터키, 폴란드, 나이지리아를 포스트브릭스로 선정
 - * 이상 포스트브릭스로 선정된 국가들은 경제의 역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부국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음

〈브릭스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주 : 2012년 이후는 IMF 전망치

〈포스트브릭스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주 : 2012년 이후는 IMF 전망치

Ⅲ. 시사점

- 2013년은 위기 이후 형성되어 온 5가지 「New Normal」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세계경제 변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성장’, ‘물가안정’, ‘세계경제 질서’, ‘정부 역할 축소’, ‘선진경제’로 대표되는 「Old Normal」과는 다른 ‘저성장’, ‘불안정성’, ‘갈등 격화’, ‘정부 역할 확대’, ‘포스트브릭스 부상’을 의미하는 「New Normal」이 고착화될 전망이다

- 「New Normal」은 「Old Normal」에 비해 불확실성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국내외 경제 및 기업에 새로운 도전임
 - 저성장, 불확실성 및 갈등 확대로 대표되는 「New Normal」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점차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통상 마찰, 환율 전쟁 등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규모 축소, 통상 마찰 확대, 규제 강화 등과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기업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저성장, 불확실성 확대 등과 같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 국내 기업들은 세계 경제상황이 「New Normal」로 대표되는 새로운 변화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직시, 경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

□ 아울러, 포스트브릭스 등 신흥시장의 부상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New Normal」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의미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브릭스 경제 및 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등 포스트브릭스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향후 중국, 인도 등의 브릭스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브릭스에 주목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